

주식·환율 변동성 커지면... 금융 부실 '도미노' 현실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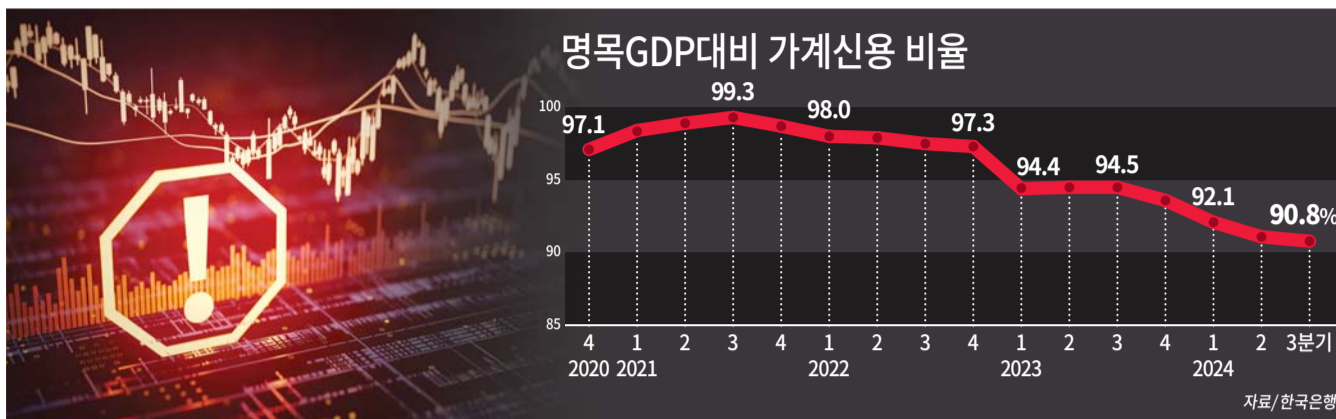
대외 불확실성에 시장 변동성 확대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우려 커져
가계·기업 신용 모두 둔화세 지속
지방·비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

대외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채권·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 취약부문 부실이 증가해 익스포저 (Exposure·위험노출금액)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9.1로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안정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신용 시장은 가계와 기업 대출은 모두 낮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



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2023년 93.6%→2024년 3분기 90.8%로 떨어졌다.

기업대출도 투자가 위축돼 증가세가 둔화됐다.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은 지난 2023년 3분기 114.8%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1분기 112.3%→2분기 111.6%→3

분기 111.2%로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시행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대외부문을 보면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까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 5일을 기점으로 1400원대로 올라선 뒤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로 1472.5원까지 올랐다.

다만 외화자금조달 여건과 대외지급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거래의 경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대외지급능력을 가능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준다.

2023년 8102억달러였던 순대외금융

자산은 2024년 1조1022억달러로 36% 증가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중국, 홍콩, 노르웨이, 캐나다 6개국 뿐이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에서 주식·채권·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돼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지방·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PF 부실, 지방·비은행에 '집중포화'

수도권 상승세 속 지방 매매가 하락
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 12% 넘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이 커진 상태다. 유동성 확충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2.4%에서 2024년 말 6.8%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출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

한은은 이러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소재 예금취급기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10.2%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은 9.8%로 평균보다 낮았고, 지방은 12.2%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을 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6%를 상회하는 저축은행의 비중은 지방이 27%로 수도권(7.1%)보다 많았다"며 "반대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6%를 하회하는 자산건전성 양호한 저축은행은 수도권이 72.5%로 지방(24.1%)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62%, 수도권은 1.67%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04% 하락했다.

지방 주택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美 관세폭탄 우려에 코스피·환율 '살얼음판'

韓 여전히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대내외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스피(KOSPI) 지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미 관세 정책 및 경기둔화 우려 등이 커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뒤 2360.6포인트(p)로 연 저점을 경신한 코스피는 추가 저평가 인식으로 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유예되면서 2671.5p까지 올랐다. 3월 들어서는 미국 경기 둔

화 우려와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등이 더해지며 2528.9p로 또다시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초 1401.3원었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472.5원으로 71.2원 뛰었다. 2월 한 달간 평균 1445.6원인 원·달러 환율은 3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1461.8원까지 오른 상태다.

2월 이후에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환율이 낮아졌지만, 2월 말부터는 미국의 관세정책을 포함한 정치·경제 이슈가 부각되며 다시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